

강원, 지방산업단지 2곳 추가 조성



강원도 원주시 소초지구와 부론지구에 도내 최대 규모의 제3, 제4지방산업단지가 각각 조성된다.

강원도는 지난 4월 12일 원주시청에서 김진선 지사와 김기열 원주시장, 박세훈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이 제3, 제4지방산업단지 조성 업무협약식을 갖고 개발 기본계획 작성 등 각종 절차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원주 우산지방산업단지 등 기존 산업단지의 기업 입주율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동화지방산업단지도 100% 분양이 완료되는 등 매년 33만~66만㎡ 규모의 공장입지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4천390억원을 들여 소초지구와 부론지구에 총 396만㎡ 규모의 제3, 제4지방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올해 기본계획 마련 및 지구지정을 마치고 있다.

또 내년 상반기 실시계획 수립과 토지보상을 완료한 뒤 2008년 상반기에 착공, 2010년말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도는 국비 확보와 지구 지정을, 원주시는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강원도개발공사는 사업시행자로서 계획 수립과 사업비 조달 및 시공을 담당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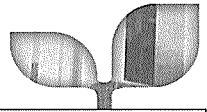
도는 제3, 제4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되면 420개 이상의 기업체가 입주해 1만1천3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5만명 이상의 인구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낙후지역 개발과 도심의 외연 확대는 물론 개별업체 단위의 산발적 공장 이전을 집단화해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남, 봄맞이 '깨끗한 환경 경남가꾸기' 캠페인 실시



경남도는 지난 13일 창원시 '주남저수지' 일원에서 도단위 기관·단체와 창원시 등 전시군의 민간단체 임직원 등 2,000여명이 모여서, 봄을 맞아 생활주변에 버려져 있는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깨끗한 환경 조성 및 도민 의식 고취를 위한 캠페인도 함께 전개했다.

이번 행사는 환경올림픽 2008 람사총회 개최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깨끗한 환경 경남가꾸기' 운동으로 도내 250여개 각급기관단체 임직원과 군인, 학생, 주민 등이 참여하는 행사로, 특히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사에서는 자발적으로 많은 임직원을 이번 행사에 참여시켜 환경정화를 실천하면서 고속도로변에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를 전 행정력을 동원



하여 수거할 것을 밝혔으며, 도로변 무단 투기행위 근절에 대한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도 하였다.

작년부터 주 5일 근무제가 전면 실시되면서 여가문화를 즐기려는 많은 사람들이 전국의 산과 계곡, 바다를 찾고 있는 반면 각종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자연을 훼손하는 일은 근절되지 않고 있어 환경오염의 심각성은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누구를 탓하기 보다는 먼저 자신을 되돌아보는 마음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경남도와 전 시군에서는 2008 람사총회 개최에 따른 환경조성을 경남부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점차 확산시켜 환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룬다는 의지로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경남도에서는 '깨끗한 환경'과 '생활복지' 구현이라는 도민의 바램을 실천하고 '세계로 향한 뉴 경남'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이 행사를 추진하면서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룬 아름답고 쾌적한 우리고장 만들기에 전도민이 다같이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대구, 산업현장기술지원 핫라인센터 호평 받고 있어

대구시와 경북대학교가 자금을 출연하여 지난 200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산업현장기술지원 핫라인센터'가 중소기업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수한 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과 각계각층의 전문가(변호사, 경영지도사, 기술사, 세무사, 회계사 등)들이 협력하여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현장기술과 경영, 통상 등 산업현장 애로기술 전 분야에 대하여 One-Stop 서

비스로 해결해 주기 때문에 분석된다.

현재 센터에는 경북대학교 공과대학,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를 비롯하여 계명대학교, 대구기능대학, 대구산업정보대학, 대구보건대학, 영남이공대학, 영진전문대학 등의 교수진과 경영지도사, 회계사 등의 많은 자문인력을 확보하고, 기업에서 전화나 팩스 한통으로 경비부담 없이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다.

특히, 지역의 100인 미만 사업장이나 자체기술 개발능력이 없고 기술지원을 하여도 이를 습득할 만한 여력이 없는 20인 미만 사업장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주어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로 5년차를 맞는 '산업현장기술지원 핫라인센터'는 다양한 전문가 조직을 가지고 산업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애로기술을 지원해 주는 수요자 중심의 중소기업 119역할을 수행하여 매년 창구를 찾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대표적인 센터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 부산, '하수 오니(汚泥) 해양투기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해양생태계 훼손을 막고,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강화를 위해 '하수처리 오니(汚泥, 하수·정화과정서 생긴 침전물)의 해양투기가 오는 2012년부터 완전 금지된다.

부산시는 하수오니, 축산폐수 해양투기에 대한 국제적 규제 강화를 비롯한 세계 환경정책의 흐름에 적극 부응하고 해양도시 부산의 큰 자산인 해양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포지엄이 열린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4일 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하수오니 해양투기에 관한 심포지엄'을 부산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주최로 박승환 국회의원(농림해양수산위원)과 이석모 교수(부경대), 유정석 해수부 해양보전과장, 이봉길 해경청 해양오염관리국장, 김용진 환경부 산업폐기물과장, 정창수 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성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창호 (사)폐기물해양배출업협회 이사 등 주제 및 토론 참석자와 관련 업체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96 런던의정서 수용을 위한 해양배출제도의 관리방향(해수부 해양보전과장) △폐기물의 해양배출 현황과 관리방안(해경청 해양오염관리국장) △유기성 폐기물의 육상처리 현황과 전망(김용진 환경부 산업폐기물과장) △하수오니의 해양배출에 대한 평가체계(정창수 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 △하수오니의 해양배출에 대한 관리방안(부경대 이석모 교수)이라는 주제로 참석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대책방안을 모색했다.

그 동안 하수처리오니 등 주요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매립과 재활용 소각 등에 비해 처리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1990년 이래 16여년간 계속돼 90년 1,069천톤에서 2005년 9,929천톤으로 약 10배 증가했다. 부산시도 현재까지는 하수처리 과정에서 1일 발생하는 오니(슬러지 : 하수, 정화 과정에서 생긴 침전물) 463톤의 94%를 해양투기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달 3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해수부와 환경부, 농림부, 해양경찰청 관련 부처들이 '육상 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을 마련 폐기물 육상처리 원칙을 확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연도별 해양투기 총 허용량 제도를 시행, 지난해 9,929천톤에서 해양투기 오염물질 규모를 2011년까지 50%수준 이하인 4,000천톤 낮출 방침이다.

특히, 해양오염 관련 국제협약인 '런던협약

'96의정서'가 지난달 3월 24일자 발효되어 총 해양투기량의 44%를 차지하고, 또한 구리, 아연 등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는 하수처리 오니는 수산물 안전을 위협하여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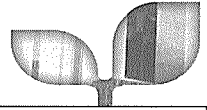
### 서울, 빗물관리제도 본격 시행



서울시에서는 도시화 과정에서 콘크리트 포장 등의 불투수면(不透水面)의 증가로 빗물의 토양 침투량이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지하수 고갈, 하천 건천화, 도시 열섬화, 홍수 시 침수피해 등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빗물을 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한 빗물관리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에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설치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빗물 관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지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주요 내용은 빗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빗물관리의 기본목표, 빗물관리시설의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빗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대형 건축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이외의 중소



규모시설에 대해서도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시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빗물관리시설 설치 자에게 시설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대지면적 2천㎡(약 600평), 건축연면적 3천㎡(약 900평) 이하 건축물에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총공사비의 50%이하로 최대 천만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또한, 빗물관리시설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빗물침투시설의 경우 급경사지 등은 설치를 제한하고 침투량은 0.01㎡/㎡ 이상, 빗물저류시설은 과거 침수지역 등에 설치하고, 용량 50㎡이상 저장조(貯藏槽)설치시에는 홍수 피해 예방시스템 등을 구축하며, 빗물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 점검 및 필요시 수질측정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

서울시에서는 빗물관리제도 시행과 관련된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서울이 친환경적인 국제도시로서의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 울산, '아름답고 푸른 울산'

### 홍보 적극 나서

울산시는 친환경 생태도시 울산의 참모습을 대내외에 알린 것은 물론 21세기 지역간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도시브랜드 향상을 도모하고 경쟁력 우위를 점하기 위해 홍보사업 4개 분야 90개 사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아름답고 푸른 울산 홍보 시행계획'을 확정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친환경 생태도시 울산 이미지 확산'을 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해 홍보수단 및 전략을 개발하고 홍보 인프라 확충은 물론 홍

보 네트워크 구축, 제도·조직의 강화 등을 통해 울산 브랜드 파워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분야별 시행계획을 보면 홍보수단 및 전략개발을 위해 언론 및 방송 관계자를 초청해 홍보를 통한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자치단체간 교류협력을 통해 긍정적 도시이미지를 확산시키며, 공무원 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해 울산 바로 알리기 운동 전개 등을 실시한다.

또한 정부청사관리소 민원대기실에 울산홍보 영상물을 상영하는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해 전략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며, 어린이·청소년 신문 제작, 외국인생활가이드북 제작 등 타깃별 차별화된 고객맞춤형 홍보 등 47개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홍보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주의식 제고를 위한 도시정체성 확립, 체험형 소재 발굴을 통한 홍보수요 창출, 홍보연계 문화·관광인프라 구축, 도시미관의 홍보자원화 사업 추진,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한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등 26개 사업을 시행한다.

아울러 홍보네트워크 저변 구축을 위해 기업체 홍보관을 이용 시정홍보를 병행하고 디카모니터, 시민명예기자단 운영 등 주민참여형 홍보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신규직원의 울산 홍보요원화 등 11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밖에 제도 및 조직 강화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홍보전문 전담조직 신설 등 홍보기반 구축 및 홍보체질 개선 사업을 실시하며 시정홍보 및 보도매뉴얼 제작, 홍보우수부서 및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등 6개 사업을 실시한다.

한편 울산시는 오는 7월과 11월 행정부시장이 주재하는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2007년 2월경 부서별 홍보사업 평가 및 보상실시 등 '아름답고 푸른 울산' 홍보를 위해 전행정력을 집중시킬 방침이다. ◀